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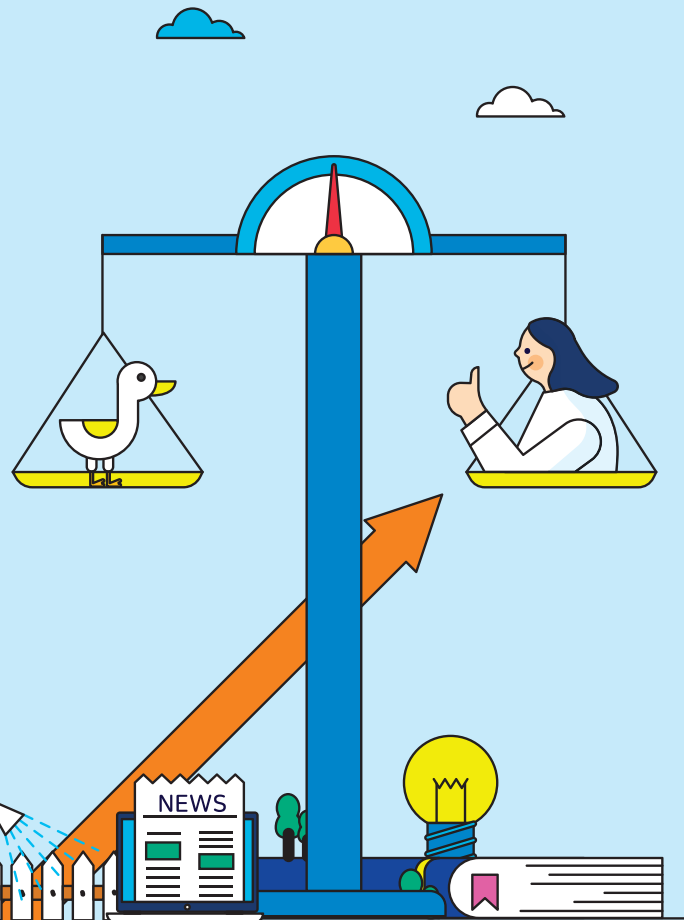
2023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무엇이 바뀌나

종오리 포함 종돈·종축장 사업대상 포함

가금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되고 있어 정부를 포함한 가금농가의 비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지난해보다 22일 빨리 발생했으며 주로 서해안 벨트 위주로 발생한 것과 달리 전남, 경기, 충북 등 전국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예년보다 위험성이 높아졌다. 특히 오리농가가 많이 모여 있는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오리농가를 비롯한 오리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월 18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총 6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육용오리 25건, 종오리 8건으로 오리농장에서만 총 3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가 오리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양계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육 시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한국오리협회에서는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2019년부터 가금과 양돈 대상으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항목 등 변경된 올해의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2023 바뀌는 방역정책

기존 사업 지원대상자는 가금과 양돈 대상으로 축산법에 의해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였지만 올해부터는 종축업 허가를 받은 농가도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설명에 의하면 허가받은 농가 중 사육만 하는 농가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난해 지침으로는 종돈장과 종축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축업도 사육을 하면서 종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종축업도 하는 농가도 추가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오리를 포함한 종돈, 종축장도 사업대상자로 포함됐다.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강화를 위해 장비 지원항목도 추가됐다. 지난해까지 터널식 소독시설(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과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면 올해는 종축업도 추가된 만큼 지원항목도 늘어났다. 추가된 항목은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수거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 왕겨 살포기, 폐사체처리 시설(보관용 시설), 고상식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축사내부 안개분무 소독장치 등 총 14가지다.

가금농장 방역시설장비
지원항목 추가
오리에 한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계열화사업자
'AI 살처분 매몰비용 부과'
강력 반발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

2022년		2023년	
국비예산	사업지원대상자	국비예산	사업지원대상자
11,300 (단위: 백만원)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농가: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 (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9,900 (단위: 백만원)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 를 받은 농가* * 농가: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가금·양돈농가 에 한함 (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규제방역과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7,500	20,000	23,630	37,666	33,000
국고(보조)	5,250	6,000	7,089	11,300	9,900
국고(용자)	5,250	6,000	7,089	11,300	9,900
지방비(보조)	5,250	6,000	7,089	11,300	9,900
자부담	1,750	2,000	2,363	3,766	3,3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방역 예산 330억원...12%가량 줄어

반면 올해 사업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삭감됐다. 지난해 총 사업비 376억6,600만 원에서 올해는 330억 원으로 12%가량 줄어들었다. 농가당 최대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이 5,000만 원이다. 지원 형태는 국고 보조 30%, 지방비 보조 30%, 용자 30%, 자부담 10%로 실제로 농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중은 40%다. 용자금리는 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오리농가 AI 방역대책’ 국회 좌담회에서 “오리 축사의 열악한 환경이 오리 농가가 방역상 취약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지만 축사 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 개축을 금지하는 조례 등 법적 규제 등이 축사 개선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다”면서 “CCTV 자료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데이터를 통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한다면 자금 지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률이 높다 보니 방역당국에서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오리에 한 해 확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전남 나주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전남 나주와 영암 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강화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계열화사업자, AI 살처분 매몰비용 부담 조치에 반발

특히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계열화 농가의 발생 비율이 높아 농식품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계열화사업자들에게 AI로 인한 살처분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가금생산자단체에서는 계열사에게 살처분 매몰비용을 떠넘기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매몰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한 재난안전기본법상에서도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어 AI로 인한 살처분 매몰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가금생산자단체에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오리협회를 포함한 가금생산자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의 AI 살처분 매몰비용 부과 사안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겨울철 사육제한과 방역지역 내 신규입식 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계열업체들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살처분 매몰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금생산자단체는 계열업체에 대한 각종 책임전가와 규제 강화는 결국 계열업체들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소속 농가들의 피해와 더 나아가 닭, 오리부문 계열화사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별방역강화조치방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소독차량(방역차량·살수차 등)을 확대 배치해 영암호, 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일제 집중소독기간(2022.11.23.~12.20, 4주간) 중 시·군 관계관이 가금농가 소독실태를 12월 20일까지 매일 점검한다.

* 나주·영암은 방역차량·살수차 7대, 함평·무안은 방역차량·살수차 6대 추가 배치



둘째, 나주·영암 지역의 육용오리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한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셋째, 육계·육용오리 등은 사육 기간을 당겨 조기에 도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역대 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넷째, 함평·무안군 소재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고위험지역에 준한 선제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 내 사육하는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대 해제 시까지 전 가금에 대해 7일 주기로 정밀검사(단, 육계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4회 정밀검사 실시 지역: (기존) 위험 5개 시·군(전북 부안·고창·정읍, 전남 나주·영암) → (확대) 7개 시·군(현행 5개 시·군 + 전남 무안·함평 추가)